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853
----------	------

발의연월일 : 2024. 8. 14.

발 의 자 : 추경호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배현진 · 백종현 · 서명옥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우재준 · 유상범 · 유명하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이종욱 · 이철규 · 이현승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최형두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
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
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도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전현희는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였음. 전현희 의원은 회의 안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을 거론하며 그 사망의 원인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음.

국회의원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음에도 권익위 고위 간부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까지 함.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망언을 내뱉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살인자라는 극언까지 쏟아붓는 등 회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지속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전현희)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다음 이유에 따라 국회의원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함.

가. 국회의원 전현희는 8월 1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안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을 정쟁화함.

지난 8월 9일 사망한 권익위 간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안을 조사한 실무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함.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한 외압으로 공무원이 희생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된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함.

나. 사실을 바로 잡고자 발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 300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김건희가 살인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었어요.”라는 도를 넘은 막말을 반복하였음.

국회의원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공개된 회의장에서 왜곡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고 정치적 이익 앞에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도구 삼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전현희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국

회법」 제24조와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는 망언과 정치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의원 전현희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